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3-11호
발행일: 2023. 10. 20. (금)
제410회 국회(정기회, 2023. 9. 1. ~ 2023.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재생에너지 확대 및 미래형 전력망 구축

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다. 국가전략기술 지원 · 육성 III

라.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10회 국회(정기회)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10월 6일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 모두 88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9월 21일 개최된 제8차 본회의에서도 모두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제410회 국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출산 제도를 도입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2) 양자과학기술 ·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3) 신상정보 공개대상 중대범죄를 확대하고 머그샷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4)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전자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제410회 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었습니다.

제410회 국회의 2023년 9월 21일 및 10월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92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의원 등 12인
4	정무위원회(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5	교육위원회(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6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등 10인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11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5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등 11인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0인
1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 등 16인
18	국방위원회(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1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2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 등 10인
24	행정안전위원회(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9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 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 등 11인
3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 등 10인
32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등 10인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 등 17인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2인
35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27)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9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40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4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4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43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4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4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 등 10인
4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 등 12인
4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등 11인
5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의원 등 15인
5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등 11인
5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의원 등 13인
5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0인
5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5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등 10인
5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등 13인
5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등 11인
5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의원 등 10인
6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 등 10인
6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등 15인
6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등 12인
66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67	보건복지위원회(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 의원 등 11인
6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 의원 등 11인
6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 의원 등 11인
7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의원 등 15인
7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 의원 등 11인
7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7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의원 등 10인
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5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7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등 11인
79	환경노동위원회(4)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0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3인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등 10인
8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 의원 등 10인
83	국토교통위원회(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8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8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8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8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8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0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	이헌승 의원 등 15인
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의원 등 11인
92	여성가족위원회(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및 미래형 전력망 구축,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 육성 III,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재생에너지 확대 및 미래형 전력망 구축

개요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는 교류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류로 변환하여 배터리(battery, 전지)에 저장하거나 태양광 발전설비 등 직류발전장치에서 생산된 전기를 바로 배터리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시에 다시 교류 전기로 변환하여 전기를 보내는 장치를 말합니다. 전 세계 ESS 산업 시장은 2021년 110억 달러에서 2030년 2천6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출처: 연합뉴스, BNEF). 최근 우리나라 전력분야에서도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ESS에 저장한 후에 다시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한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공공 ESS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국회도 이와 관련한 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3-5호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10월 6일 본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활성화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전력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에 다시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023-10-06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 · 新시장 창출 (산업부)
과제목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 ·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주요 내용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 산업 · 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에너지 공급망)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 제고

-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추진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 · 저소비형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 · 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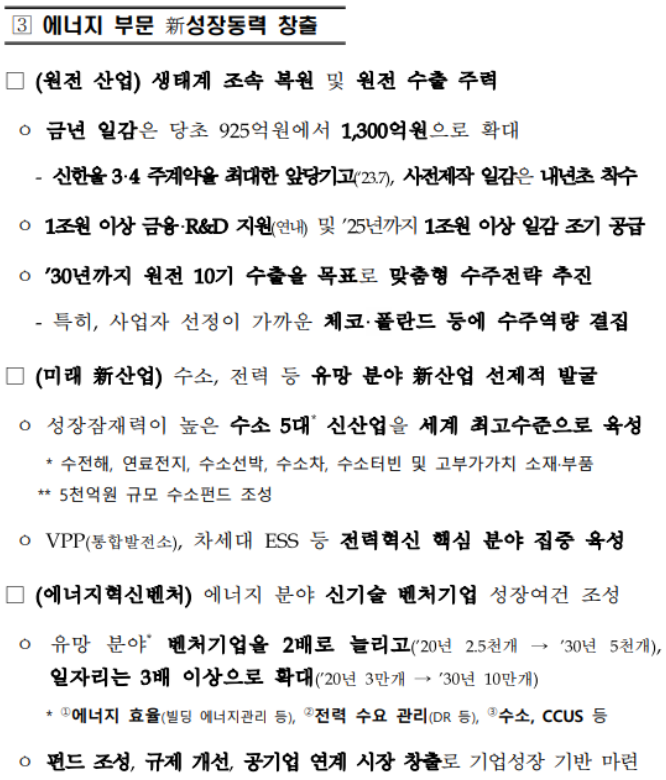
(전력망 · 시장) 전력시장 ·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 확대

▼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2. 7. 12.)



3 에너지 부문 新성장동력 창출

□ **(원전 산업) 생태계 조속 복원** 및 **원전 수출 주력**

○ **금년 일감**은 당초 925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확대

- **신한울 3·4 주계약을 최대한 앞당기고**('23.7),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초 착수**

○ **1조원 이상 금융·R&D 지원**(연내) 및 '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 조기 공급**

○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맞춤형 수주전략 추진**

- 특히,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체코·폴란드 등에 수주역량 결집**

□ **(미래 新산업)** 수소, 전력 등 **유망 분야 新산업 선제적 발굴**

○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소 5대*** **신산업**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육성**

*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및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 5천억원 규모 수소펀드 조성

○ VPP(통합발전소), 차세대 ESS 등 **전력혁신 핵심 분야 집중 육성**

□ **(에너지혁신벤처)** 에너지 분야 **신기술 벤처기업** 성장여건 조성

○ 유망 분야* **벤처기업을 2배로 늘리고**('20년 2.5천개 → '30년 5천개), **일자리는 3배 이상으로 확대**('20년 3만개 → '30년 10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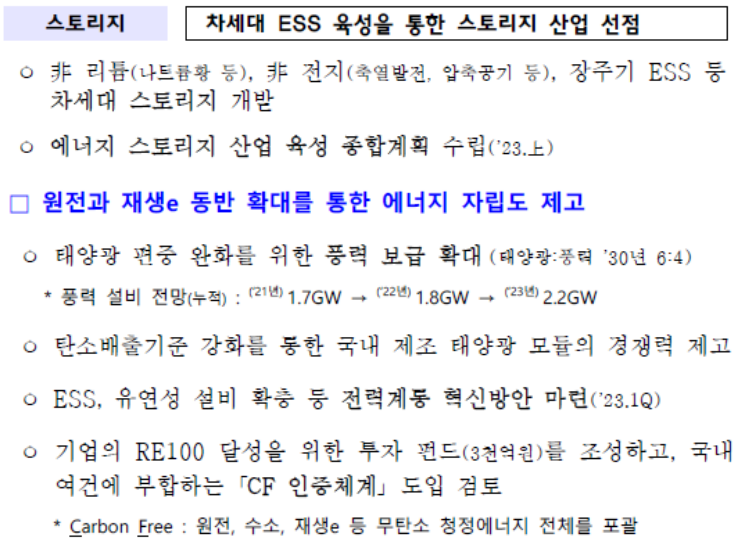
* ①**에너지 효율**(빌딩 에너지관리 등), ②**전력 수요 관리**(DR 등), ③**수소, CCUS** 등

○ **펀드 조성, 규제 개선, 공기업 연계 시장 창출**로 기업성장 기반 마련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2023년 정부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2. 12. 27.)



스토리지	차세대 ESS 육성을 통한 스토리지 산업 선점

○ 非 리튬(나트륨황 등), 非 전지(축열발전, 압축공기 등), 장주기 ESS 등 차세대 스토리지 개발

○ 에너지 스토리지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23.上)

□ 원전과 재생e 동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 태양광 편중 완화를 위한 풍력 보급 확대 (태양광:풍력 '30년 6:4)

* 풍력 설비 전망(누적) : ('21년) 1.7GW → ('22년) 1.8GW → ('23년) 2.2GW

○ 탄소배출기준 강화를 통한 국내 제조 태양광 모듈의 경쟁력 제고

○ ESS, 유연성 설비 확충 등 전력계통 혁신방안 마련('23.1Q)

○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투자 펀드(3천억원)를 조성하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CF 인증체계」 도입 검토

* Carbon Free : 원전, 수소, 재생e 등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체를 포괄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직접 전력판매제도(PPA) 허용 2022. 11.
이용빈 의원안: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 등 2023. 2.

제주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설비 본격 도입…출력제어 완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이차전지 기술 초격차 확보, 2030년까지 20조원 투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멀티미디어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0. 5. 30.

□ 전기저장시스템(이하 'ESS')은 교류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나 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지(battery)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시에 다시 교류 전기로 변환하여 전기를 보내는 장치임

◦ ESS의 용도는 크게 ① 피크저감, ② 주파수 조정, ③ 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로 구분할 수 있음

◦ 2020년 2월 현재 1,622개 사업장에 ESS가 보급되었으며, 이 중 28개 사업장에서 ESS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 기준으로 화재 발생 확률은 1.73%임

□ ESS 보급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①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급하였다는 점, ② 다수의 화재사고가 발생한 점, ③ 전력계통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 ④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전력 수요관리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 등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전기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 ESS가 전력계통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ESS 화재 사고 이후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정지한 사업자의 수익 기회 상실에 대한 합리적 대응 조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ESS 설치 사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ESS를 가동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보강할 있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거나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현안보고서」2016. 6. 30.

본 보고서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지능형전력망법 제2조 정의에 기술된 '이용효율'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신뢰도 · 안전도 · 효율 등'의 용어로 재정의하고 둘째, 열효율 및 손실률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며, 셋째, 스마트그리드 사업 거점지구에서 다양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능형전력망법을 개정하고 넷째, 핵심 기술인 전력시스템 감시 · 제어 기술까지 투자를 확대하며 다섯째, 스마트그리드 도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며 여섯째, 에너지산업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작성 기관을 조정하고 일곱째,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에너지 공급원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재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발전 및 판매 겸업 사업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계통안정화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8-28 2018. 12. 31.

변동성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7년 기준, 이미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전력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국가가 7개로, 현재의 추세로 확대될 경우 2050년이면 전 세계 전력 구성의 절반이 변동성 재생에너지로 채워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전체 전력의 20%까지 확대하려 한다. 그중 신규설비의 대다수를 변동성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으로 보급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도 변동성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어 2030년이면 1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전력 구성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정책 방향과 현재 보급되는 태양광과 풍력의 빠른 증가세를 고려할 때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시기이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된 후, 2030년의 에너지시스템 하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예비력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에 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유연성 자원인 ESS의 효과도 추가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분석과 더불어 현재 변동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기술과 정책들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 각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개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복잡하고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전산화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사이의 찬반 대립과 의료 정보 유출 우려 등 이유로 관련 입법이 매번 무산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전산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

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의료 ·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소비자 요청 시 요양기관(병 · 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6일 본회의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약 3,500만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그런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3-10-06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과제목표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

주요 내용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단축(3개월 → 1개월)

⋆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

(간편결제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

(모바일 OTP 확산) 全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 ·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 단축

(펫보험)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

2023년 정부 업무보고(금융위원회, 2023. 1. 30.)

□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 구축

❶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여타 예금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한도* 적용 추진

* (예) 기존 예금보호한도(5천만원) +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별도 예금보호한도(5천만원)

❷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펫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 반려동물 등록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정비, 펫보험 전문보험사 허용 및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확대 등

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추진

❹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확대(최대 1천만원 → 5천만원)

❺ 계약자에 손해가 되는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마련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 승환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추진

❻ 코로나로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09:30~15:30 → 09:00~16:00)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안: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 근거 마련 2020. 11.
전재수 의원안: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 근거 마련 2020. 9.
정청래 의원안: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 근거 마련 2021. 8.
김병욱 의원안: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 근거 마련 2021. 6.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실손비서」도입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정책세미나 2022. 11. 14.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소비자 권리 보호인가 보험사 이익률 개선 방안인가 대한민국국회 정책세미나 2021. 6. 2.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국회 정책세미나 2019. 5. 2.

[보도참고] 앞으로는 병원 진료 후 One-Stop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보도자료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논점」2020. 9. 7.

2020년 상반기 3,466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을 보완하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중이고, 관련 법안이 논의를 앞두고 있어, 이 글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현황 및 문제점, 절차 간소화 입법 시 고려사항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보험연구원 CEO Report 2020-04 2020. 8.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건이 2018년 8천 5백만건에 이르지만, 피보험자가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초창기의 전통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피보험자에게는 청구 시간 소모 및 미청구, 요양기관에게는 종이증빙서류 발급 행정부담 과다, 보험회사에게는 보험금 지급행정부담 과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체계는 요양기관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환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즉시 전송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자의 증빙서류 전자전송 요청이 요양기관에게 완전히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현재의 전통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지, 각 보험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전산망 연결, 보험중계센터의 설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망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동 개선안은 현실화 가능하고 이해당사자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실손보험의 특징 및 시장 이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 지식 비타민」 2019. 8. 26.

☐ 실손의료보험 개념과 특징
☐ 실손의료보험 변화
☐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유용한 Tip
☐ 실손의료보험 시장 이슈

다. 국가전략기술 지원 · 육성 III

개요

양자기술은 초고속 연산 · 초정밀 계측 등 현재 컴퓨팅 기술한계를 뛰어넘어 신약개발,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양자혁명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강화(양자암호통신)와 암호체계 무력화(양자컴퓨팅)라는 양면성을 가져 국가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큰 전략적 가치를 지닌 기술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AI · 로봇 등과 함께 양자기술을 필수적 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2035년까지 민 · 관 합동으로 최소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양자과학기술을 선도국의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양자 핵심인력도 현재의 7배 가까운 2,500명까지 늘리고 양자분야 종사인력도 1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2035년까지 양자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고, 양자기술을 공급하고 활용하는 기업도 1,2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회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3-1호 국가전략기술 지원 · 육성, 제2023-3호 국가전략기술 지원 · 육성 II 이슈 등 참조).

2023년 10월 6일 본회의에서는 양자컴퓨터 · 양자통신 ·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과 이와 관련한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자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내용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 · 제어 · 계측 · 전송 · 저장 · 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은 기존 첨단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로서 미래 국방과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양자정보통신기술 육성을 위한 일부 조항만 있을 뿐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 · 장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추진, 상용화 촉진, 표준화 추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육성, 전문인력양성, 양자팹 지원, 양자연구센터 지정, 양자클러스터의 구축 및 국제협력 등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3-10-06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과제목표

기술패권 경쟁시대, 글로벌 시장선도와 국익 · 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주요내용

(전략기술 투자확대) 경제성장과 안보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 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육성

* 예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 마련
-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 · 산업 기반 조성 추진

(특별법 제정) 전략기술 육성 컨트롤 타워 구축, R&D 우선 투자, 인력양성, 국내 · 외 협력 등 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초격차 R&D프로젝트)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기획 · 추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획·관리와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

- 출연연 · 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거점으로 지정하여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 활성화

(기술 스케일업) 대학 · 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 강화

(초연결 인프라) 전략기술 · 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한 5G · 6G, 양자 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구축

(전략적 국제협력) 美 · EU 등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하여 국제 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강화

※ (양자) 美·EU 등 기술공동연구센터 설치, (감염병)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쉴드(APIS) 신설 등

▼

2022년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7. 15.)

1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 개요

○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 **R&D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우리 경제·사회 변혁을 이끌 **대형성과 창출**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며, 선택과 집중,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 설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주제 : 국가 전략기술 집중)** 국가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22. 9월)을 **선정**하고, 중점기술 및 개발목표를 포함한 **전략 로드맵** 마련(23년)

*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차세대원전 등 10개+α

-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사업**에 대한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 시스템** 도입(23년~)

2 미래 혁신기술 선점

□ 개요

○ **민관 공동개발, 수요·시장 창출, 민간 기술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며, 기술개발(R&D) 기반 위에 **미래 유망 신산업 선점**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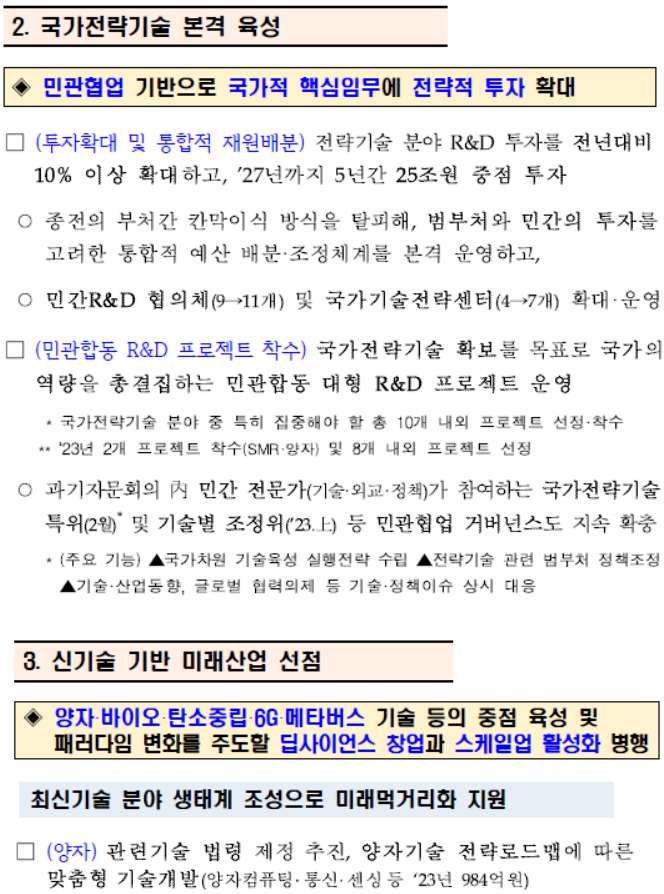
○ **(첨단분야 : 민관 공동개발) 양자, 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 주력

- **(양자) 기업연계 플래그십** 등 산학연 협력연구 통해 세계 3번째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26년, 490억원) 및 **양자인터넷**(~26년, 456억원) 개발로 **원천기술 신속 확보**
  * (美) '22년 IBM社 127큐비트 서비스 시작, (中) '21년 중국과기대 50큐비트 구축
- **(바이오) 뇌과학·합성생물학** 등 **첨단바이오**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바이오+디지털 융합연구**(AI 활용 신약개발, 디지털치료제 등) 확대
- **(6G)** 조기 상용화(30→28년)에 대비, 초기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R&D(~30년, 약 1조원) 통해 **6G 국제표준**과 **핵심특허**를 확보(~26년, 48건)하고, **26년 세계최초 pre-6G 기술 시연**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2023년 정부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12. 28.)



2.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 **민관협업 기반으로 국가적 핵심임무에 전략적 투자 확대**

□ (투자확대 및 통합적 재원배분) 전략기술 분야 R&D 투자를 전년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27년까지 5년간 25조원 중점 투자

○ 종전의 부처간 칸막이식 방식을 탈피해, 범부처와 민간의 투자를 고려한 통합적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본격 운영하고,

○ 민간R&D 협의체(9→11개) 및 국가기술전략센터(4→7개) 확대·운영

□ (민관합동 R&D 프로젝트 착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민관합동 대형 R&D 프로젝트 운영

*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특히 집중해야 할 총 10개 내외 프로젝트 선정·착수
** '23년 2개 프로젝트 착수(SMR·양자) 및 8개 내외 프로젝트 선정

○ 과기자문회의 內 민간 전문가(기술·외교·정책)가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특위(2월)* 및 기술별 조정위('23.上) 등 민관협업 거버넌스도 지속 확충

* (주요 기능) ▲국가차원 기술육성 실행전략 수립 ▲전략기술 관련 법부처 정책조정 ▲기술·산업동향, 글로벌 협력의제 등 기술·정책이슈 상시 대응

3.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 **양자·바이오·탄소중립·6G·메타버스 기술 등의 중점 육성 및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딥사이언스 창업과 스케일업 활성화 병행**

최신기술 분야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먹거리화 지원

□ (양자) 관련기술 법령 제정 추진, 양자기술 전략로드맵에 따른 맞춤형 기술개발(양자컴퓨팅·통신·센싱 등 '23년 984억원)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 3.
변재일 의원안: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 2.
박성중 의원안: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반도체 및 양자기술 패권 경쟁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 : 기초과학의 역할과 교육의 방향
대한민국국회 정책세미나 2023. 6. 1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보도자료

2035년까지 양자기술에 3조 쏟는다…"선도국 기술수준 85% 달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기구 운영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미국 「양자연구집중지원법」 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020. 3. 4.

□ 「양자연구집중지원법」 제정 배경

◦ 에너지 최소량의 단위인 양자의 고유한 물리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양자 기술은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컴퓨팅 연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킴

◦ 미래 산업 · 안보에서의 양자 기술의 중요성이 주목되면서 주요국은 양자 연구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국은 2018년 12월 21일 「양자연구집중지원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제정을 통해 향후 10 년간 국가적 차원에서 양자 연구에 집중할 의지를 표명함

□ 주요 내용

◦ 이 법률은 양자 연구 관련 대통령 직속 기관을 신설하고 대통령에게 향후 10 년간 '양자연구집중지원 프로그램'(National Quantum Initiative Program)을 수립할 역할과 의무를 부여함

◦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국립과학재단 · 에너지부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함

◦ 정부는 초기 5 년간 12억 달러(1조 4600억 원)를 양자 연구에 투자하고, 산 · 학 · 연 · 관 협력, 다학제 협력, 인력 양성, 기술이전 및 표준화 제고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 시사점

◦ 국내 양자 기술 수준은 주요 경쟁국 대비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자 연구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인 투자, 산 · 학 · 연 · 관 협력, 우대 시책 등을 통해 양자 연구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산업경제분석] 미 · 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양자 정보기술의 현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IET 산업경제」 2019. 12. 31.

양자 정보기술은 미 · 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이자 5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양자 정보기술의 개념과 중요성, 국가별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이 디지털 시대에서 양자시대로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민감하게 주시하고, 양자 우위 시대가 가져올 위기와 기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양자 정보기술은 중첩과 얽힘이라는 양자 상태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 디지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보통신기술이다. 디지털 시대에서 양자시대로 전환이 되면 국방, 산업, 사회 전반에 큰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데, 중국은 양자시대를 미국을 제치고 선발 주자로 도약할 역사적 기회로 여기고 있다. 양자 기술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중국을 경계하면서 EU, 미국, 일본 세 지역 사이에서는 기술 상용화 이전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양자 정보기술의 발전을 위해 우선 인재양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글로벌 양자산업 생태계와 국제협력의 장에 빨리 참여해야 한다. 양자 컴퓨터로 발생할 보안 위협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양자기술을 단기적 경제적 관점을 뛰어넘어 공동체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로 활용하기 위한 수요를 개발해야 한다.

라.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개요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지역상담기관에서 출산 · 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을 마치고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후 신청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출산제는 해외에서 이미 도입된 익명출산제, 비밀출산제와 유사한 것으로 자신의 임신 · 출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가 익명을 보장받으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출생아 유기 및 영아살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집니다. 보호출산제 도입은 지난 2023년 6월 30일 도입된 출생통보제 실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3-7호 출생통보제 도입 이슈). 즉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병원 밖 출산 증가 등을 방지하고 빈틈없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임산부 상담 · 지원과 보호출산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본회의에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보건복지위원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에 대한 권리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나, 우리 사회에는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건의 주된 동기로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양육자 부재 또는 단독양육의 어려움, 출생신고 곤란 등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영유아 유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그 동기에 있어서 오로지 개인만을 탓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3-10-06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과제목표

임신 · 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주요 내용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 원, '24년 100만 원으로 단계적 확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 ·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 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 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산모 · 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 · 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 · 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 · 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아동 · 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참고 자료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2.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11.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정책세미나 2022. 7. 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보도자료

보호출산법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보도자료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보도자료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 · 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023. 7. 6.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의료기관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가 해소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산모의 의료기관 회피가 우려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태생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이에 익명출산 및 비밀출산 관련 논쟁의 지형을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